
‘朝紡사건’의 정치적 고찰

배석만 / 부산대학교 강사

目 次

I. 머리말	III. ‘조방사건’의 정치과정
II. ‘조방사건’의 전모	1. 최초의 정치적 선택-조방낙면사건
1. 사건의 개요	2. 선택의 변용-강일매의 관인 임명과 조방사의
2. 조선방직의 특별한 위상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I. 머리말

이른바 ‘조방사건’은 1950년대 최대의 경제스캔들이었다. 1951년 3월 당시 조방의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시작된 조방사건은 1952년 3월 조방과업이 종결될 때까지 만 1년 동안 당시 한국 최대 규모의 방직공장이었던 朝鮮紡織株式會社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를 의미한다.

사건은 좁게 본다면 정부가 관리하는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교체를 둘러싼 갈등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1년간의 긴 갈등의 결과로 변한 것은 관리인이 기존의 정호종(鄭浩宗)에서 강일매(姜一邁)로 교체된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처음부터 기업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정계와 노동계 전체의 커다란 이슈였다. 당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이승만과 국회가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개입했음은 물론, 노동계 역시 그 중심인 대한노총과 전진한(錢鎭漢)이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자의 한 축이었다.

조방사건에 대해서는 일찍이 나카오 미치코(中尾美知子)가 해방 후 한국식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증을 토대로 자세히 분석하였다.¹⁾ 그녀는 195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개되는 ‘조방쟁의’에 주로 주목하여 ‘기업과 국가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위인 기형적 노사관계의 스타트라인’으로서 조방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문석이 1950년대 노동분쟁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하는 일환으로 조방쟁의를 다루었다.²⁾

한편 배석만은 기업경영사적 관점에서 해방 후 조방을 분석하였다.³⁾ 그는 한국전쟁 당시 시설파괴 없이 유일하게 가동된 대규모 면방직공장이라는 자본축적의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던 조방이 1950년대말 급속하게 몰락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조방사건을 들었다.

본 연구는 노사관계와 경영의 측면에서 조방을 분석한 이들 기존 연구를 참조하면서 조방사건이 일어나고 전개되는 과정의 정치적 측면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추출해 내는 것

1) 中尾美知子, 1990, 『1951-52년 조선방직쟁의-현대한국 노사관계의 스타트 라인-』, 고려대 사학과 석사논문; 1991, 1992 「1951-52年朝鮮紡織爭議--現代韓國勞使關係のスタートライン(1)(2)」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397, 399号,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

2) 서문석, 2007, 「1950년대 귀속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사학』, 한국경영사학회.

3) 배석만, 2001, 「해방후 조선방직의 경영과 그 성격」 『지역과역사』 9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을 목적으로 한다. 조방사건의 결과가 이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겠다는 것 보다는 조방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내려지는 일련의 ‘정치적 선택’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정치 과정’에 주목한다. 즉 ‘朝紡落棉事件’이라는 최초의 선택이 어떤 정치적 역학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변화하는 정치역학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밝혀 볼 것이다.

조방사건의 정치적 측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경제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규정력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았고, 전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방이라는 일개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귀속기업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조방쟁의에 주목한다면 노사관계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조방낙면사건’부터 시작되어 조방파업으로 이어지는 1년간의 조방사건 그 자체는 실제로는 이승만의 대통령연임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방사건을 정치적 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동 사건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사실 위에 언급한 기존 연구들도 이 정치적 측면에 주목하였지만 구체적인 분석에 이르지 못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조방사건의 전모를 개략하고 조방사건 발단의 주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당시 조방의 특별했던 위상을 검토한다. 3절에서는 조방사건의 발생과 전개의 정치과정을 분석한다. 우선 최초의 정치적 선택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기존 관리인에게 불하한다는 귀속기업체 처리법칙이 부정되고 ‘국영화’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정치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 정치적 선택의 변용으로서 강일매의 등장과 조방쟁의가 전개되는 정치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II. ‘조방사건’의 전모

1. 사건의 개요

1951년 3월부터 1952년 3월까지 1년간에 걸쳐 ‘조방낙면사건 →강일매의 관리인 취임→조방파업’으로 이어진 조방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 연구를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 또 당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일대사건이었으므로 언론에 비교적 자세히 보도되었다. 여기서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조방사건은 1951년 3월 불하를 위한 공개입찰이 갑자기 취소되고 당시 조방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시작되었다. 공개입찰은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기되었고, 이후 19일 입찰이 예고되었으나 다시 26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26일 입찰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무기한 연기가 발표되었다. 조방 불하를 위한 공개입찰이 3차례 연기 끝에 무기연기 되자 당시 언론은 ‘여태까지의 불하에 있어 조방 같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여 의아함을 나타냈다.⁴⁾

그러나 이 의아함이 해소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4월 8일 정호종 이하 당시 조방의 경영을 맡고 있었던 경영진과 노조위원장 등 20여명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⁵⁾ 이들은 조방이 불하될 경우 귀속재산처리법의 우선권 조항에 의해 불하를 받을 것으로 확실시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스스로도 조방을 불하받을 것임을 당연시 하고 있었다. 당시 경영진에 참여하고 있던 김지태(金智泰)는 조방을 기존 경영진에게 불하한

4) 『부산일보』 1951.3.27.

5) 『동아일보』 1951.8.15.

다는 상공부장관의 내락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고 슬회하고 있다.⁶⁾ 최초의 공개입찰 실시 예정일의 하루 전날인 3월 2일 발표된 조방노조 위원장⁷⁾ 장재봉(張在鳳)의 성명서는 김지태의 회고를 뒷받침한다. 장재봉은 조방 5,000천 종업원에게 보내는 성명서에서 조방이 현 경영진의 적절한 시책 아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노자협조로서 화기에애한 공장을 건설했다고 자평하고, 정부 역시 이러한 노자협조의 원만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불하 후의 조방 경영과 관련해서도 노사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천명하였다.⁸⁾

불하 후 조방 경영에 대한 노사간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조방의 주식지분을 노사가 5:5로 나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조방을 불하받을 경우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불하대금을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에 근거한 것이었다. 경영자측의 자금은 대자본가인 김지태가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⁹⁾, 노조의 경우 종업원에게 후생용으로 지급하고 있던 광목을 불하대금 마련을 위해 내놓게 할 계획이었다. 특히 불하가 예정된 전달인 2월에는 조방의 광목 생산이 7만필을 넘어 월간 생산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을 기념하여 회사측은 종업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후생용 광목의 특배를 실시하였다. 노조는 이 특배된 광목을 불하대금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¹⁰⁾ 전체적으로 조방

6) 한국일보사, 1980, 『재계회고』 6, 114쪽.

7) 정확한 명칭은 ‘대한노총 부산지구연맹 조방특별지부 위원장’이었다.

8) 『부산일보』 1951. 3. 2.

9) 김지태는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불하 후 조방의 경영권을 장악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공부장관의 특명으로 불하 후 조방의 사장직에 내정되어 있었다고 회고했다(한국일보사, 1980, 앞의 책, 114쪽).

10) 종업원 후생용으로 지급되던 광목은 20마 정도인데, 2월에는 이 20마 외에 특별히 30~70마를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 광목을 공동 경매하여 3억6,000만환을 마련하여 불하대금에 대비했다(「귀속기업체(조방)의 불하에 관한 보고」 『제64

불하와 관련하여 기존경영진과 노조는 자신들이 불하를 받을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그 형태는 노사가 불하대금을 공동으로 염출하고 불하 후 지분을 그에 상응하여 나눠 갖는 상당히 독특한 형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입찰이 3차례 연기된 끝에 4월초 경영진과 노조위원장이 구속된 것이었다. 구속의 혐의는 단순한 부정협약이 아닌 이적행위에 용공혐의까지 포함된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적행위는 군용의류를 만드는 광목에 불량 낙면을 혼입하여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림으로서 적을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었고, 용공혐의는 남로당 등 좌익인물들과의 내통 및 금품제공 등이었다.¹¹⁾

조방에 대한 공매입찰이 무기연기 되고 기존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조방 불하는 사실상 취소되었다. 대신 정치권에서는 조방의 ‘국영화’가 대두되었다. 최초로 국영화의 얘기가 흘러나온 곳은 언론이었다. 『국제신보』는 3월 26일 3번째로 조방 공매입찰이 연기되었음을 보도하면서 일부에서 조방의 국영화론이 대두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¹²⁾ 그리고 29일에는 임용순(任容淳) 등 국회의원 11명이 조방의 불하를 중지하고 국영화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국회 상공위원회에 제출하였다.¹³⁾

그리고 조방 사건으로 구속된 경영진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한참 진행되던 5월 14일 이승만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귀속기업체 관할부서인 상공부장관과 관재청장에 조방의 국영화를 지시했다.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1) 『국제신보』 1951.5.20; 5.25; 5.27.

12) 『국제신보』 1951.5.26.

13) 『국제신보』 1951.3.31.

“조선방직회사를 경매하기로 한 것이나 지금에 이르러 정부의 여러 가지 議論을 듣는데 이 거대한 회사를 민간에 주어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런지 확신키 어려움으로 정부에서 상당한 기술과 公心 가진 사람에게 맡겨서 국유로 운영하면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議論이 있어서 나로서도 그와 같이 동의하고 있으니 … 나의 의도가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이니 이를 고려해서 자세히 보고할 것을 요함”¹⁴⁾

대통령지시가 있는 후 보름 정도가 지난 1951년 5월말 조방은 국무원 고시 제13호에 의거한 국무회의 의결로서 발표된 국영기업체 명단에 면방직 귀속기업체 중 유일하게 국영기업체로 지정되었다. 불하대상에서 제외하여 국영화하는 기업체의 대부분은 기간산업, 중화학공업 계열 기업으로 조방 부산공장 및 대구공장이 끼어있는 것 자체가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였다.¹⁵⁾ 대통령의 지시가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을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¹⁶⁾

1951년 8월 28일 부산지법 제4호 법정에서는 조방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대부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주요 인물인 김지태, 정호중, 장재봉의 언도형량을 보

14)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회사 국영에 관한 건(1951.5.14)」, 국가기록원.

15) 『부산일보』 1951.6.1

16) 정확하게 말하면 지정된 업체를 앞으로 국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총 42개 기업체에 달하는 이들 기업체를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상공부와 기획처 등 관련 부처간의 의견 조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민간주주에 대한 보상문제, 정부재정에 의한 경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문제 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 만으로 보더라도 이 문제가 이승만의 직접 지시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영화 문제는 보류되고, ‘국영기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국제신보』 1951.8.5).

면 김지태와 장재봉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정호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였다.¹⁷⁾ 그리고 며칠 뒤인 9월 5일 강일매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조방의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이승만의 정치적 심복이었던 강일매가 조방의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조방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게 된다. 노사간의 대립이 본격화되어 노조가 쟁의에 돌입하였고, 결국 파업으로까지 치달았기 때문이다. 앞선 정호종 경영체제에서의 노사협조적 관계가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강일매체제하에서의 노사대립은 장기간 극한 상황을 연출했다.

대립의 정점은 1952년 3월 11일 배후조종의 핵심인물이었던 대한노총 위원장 전진한(錢鎭漢)이 국회 본회의 단상에서 조방파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순간이었다.¹⁸⁾ 그러나 즉각적인 이승만의 파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세지가 나오고¹⁹⁾, 전진한이 여기에 굴복함으로써 조방파업은 1952년 3월 12일 단 하루의 파업을 끝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승만이 직접 강일매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일매는 조방에 대한 완벽한 장악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55년 정부로부터 동 회사를 불하까지 받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불하과정에서도 권력의 뒷배가 있었는데, 대통령비서관이었던 박찬일(朴贊一)이 장본인이었다.²⁰⁾ 그는 경무대에 인의 장막을 치고 무

17) 『국제신보』 1951.8.30.

18) 『국제신보』 1952.3.13.

19) 오전 11시에 있었던 전진한의 국회선언에 대해 당일 오후 이승만은 대통령담화 형식으로 즉각 대응했다.

20)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 1960, 『진정서-조선방직주식회사 종업원 피탈주권 환원에 관한 건-』.

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정권의 실세였다.²¹⁾

반면 강일매 경영체제의 퇴진을 시도했던 노조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파업과 관련해서 주동자 30여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1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와 별도로 강일매는 종업원 내에서 대한노총 소속으로 전진한파로 분류되는 노동자 100여명을 1차로 해고하고, 추가로 350명을 해고했다. 이 무더기 해고에 대해서는 좀 심했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승만대통령이 직접 중재하여 2차 해고자는 전원 복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차로 해고된 종업원의 복직은 없었다.

조방파업이 있는 지 반년이 지난 9월 『국제신보』는 조방파업 당시 해고당한 조방 여직공이 그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는데, ‘해고자는 복직을 못하고 타처에도 구직하지 못하여 가두를 방황. 특히 여직공들은 밤의 여인으로 전락, 운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²²⁾

4.19혁명 이후 이들 해고된 노동자들은 1952년 파업당시 노조 위원장이었던 박승대(朴昇臺)를 중심으로 ‘조방쟁의 피탈주권쟁취위원회’를 결성하고, 조방의 상황을 1951년 3월로 되돌려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다.²³⁾ 1951년 3월이란 정호종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과 노조가 5대5의 출자로 조방을 불하받기로 한 시점을 말한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조방은 1968 부산시로 넘어가 철거되어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 조방사건이 일어난 지 17년만의 일이며, 강일매에게 불하된 지 13년 만에 한국 최대의 기업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다.

21) 『동아일보』 1960.5.5; 5.12.

22) 『국제신보』 1952.9.9.

23)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 1960, 『앞의 책』 참조.

2. 조선방직의 특별한 위상

해방 후 남한에서 가장 잘 나가던 기업체 중 하나인 조방을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한 조방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특별해진 조방의 위상을 언급해야 한다.

조방은 한국전쟁 전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식민지 공업화의 과정에서 가장 발전한 공업분야가 면방직공업이며 조방은 한반도에 최초로 생긴 면방직 대공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 가네보(鐘淵紡績), 토요보(東洋紡績) 등 일본 면방직 대자본들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대규모 공장들을 설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조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던 것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거에 절대적인 위치로 다시 상승하게 된다. 그 이유는 주지하듯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시설과 파괴로 부산에 위치한 조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직공장들이 생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방은 급격히 생산을 증대시켜 2만 필에 불과하던 월간 광목 생산량은 앞서 언급했듯이 7만필을 넘어서게 되었다. 한국전쟁기 유일하게 가동한 대형 면방직공장이었으므로 면방직시장에서의 조방의 위치는 가히 절대적이었고, 군수용 피복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군수시장 역시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생산증가에 비례하여 노동시간도 급격히 늘었다. 전쟁 전 11시간 2교대이던 작업방법이 1952년 10월부터 8시간 3교대로 풀가동되었고,²⁴⁾ 작업일수도 1949년 307일에서 최고를 이룬 1952년에는 334일까지 확장되었다.²⁵⁾ 3교대 작업과 작업일수가 늘면서 노동자수도 증가하여 1949년 4,000여명이던 것이 1952년 6,106명, 1953년에는 6,700

24)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1956, 자료편-22쪽.

25)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1958, 통계편-4~5, 102~103쪽.

명까지 늘어났다.²⁶⁾

이런 조방의 위상으로 인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조방을 언급할 때는 거창한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어 다녔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큰 공장’이라는 이승만의 인식을 필두로²⁷⁾,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체’²⁸⁾, ‘전국 최대 유일한 대조방(大朝紡)’²⁹⁾, ‘매우 거대한 국가재산’³⁰⁾ 등이 그것이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변모한 조방의 이런 절대적인 위상은 이후 조방사건의 계기가 된 두 가지 움직임을 생산하게 된다. 첫째는 1951년 귀속기업체 불하가 본격화 되면서 조방을 불하받으려는 사람들 간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조방 공개입찰을 앞두고 경영진과 공동으로 회사를 불하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던 노조가 공개성명을 통해 ‘조방을 탐내는 정상배, 모리배, 외래기업주를 한사코 배격할 것이다’이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³¹⁾, 당시 언론도 ‘조방 입찰을 둘러싸고 수 개의 재벌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주목이 매우 크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³²⁾ 둘째는 정치권 역시 조방 불하를 단순한 일개 기업체의 불하로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이승만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조방을 불하받을 유력한 인물로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승만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민우회 소속의 김지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승만과 국회의 대립은 점점 노골화되던 시

26) 조선방직주식회사, 1952, 『조방의 개황』, 29쪽; 한국은행조사부, 『면방직공업에 대한 조사』, 475쪽.

27) 공보처, 1953, 「조방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12쪽.

28) 「귀속기업체(조방)의 불하에 관한 보고」 『제6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29) 김지태, 1976, 『나의 이력서』, 한국능률협회, 147쪽.

30)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사건 처리에 관한 건(1951.5.14)」, 국가기록원.

31) 『국제신보』 1951.3.2.

32) 『국제신보』 1951.3.3.

기에 자신의 대통령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야당 국회의원이 최대의 기업체를 불하받는다라는 시나리오는 이승만으로 하여금 조방 불하를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었음에 확실하다.

Ⅲ. ‘조방사건’의 정치과정

1. 최초의 정치적 선택—조방낙면사건

해방 후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경제건설 최대의 쟁점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적국의 사유재산 몰수를 금지한 ‘헤이그 육전법규’가 장벽이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노동자자주관리운동’으로 대표되는 귀속기업체내의 노동자 지분 보장을 위한 저항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해방 후 남한을 최초로 통치한 미군정은 3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이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즉 최소한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탄생을 위하여 헤이그 육전법규를 무시하고 모든 귀속재산을 접수하였으며(법령 33호), 통치말기부터는 접수한 재산을 불하하여 사적자본가의 ‘위로부터의 창출’을 모색했다. 미군정은 귀속기업체를 접수한 후 관리경영을 위해 관리인 제도(이사회제도 포함)를 두고, 특정 인물들을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경영을 맡겼다. 그리고 해당 기업체를 불하하여 민영화 할 경우 이들 관리인에게 우선권을 주어 불하를 받도록 했다. 이 모든 과정이 미군정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여 미군정기에 이미 원형이 형성된 귀속재산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1951년 3월 조방의 불하가 계획된 것도 이렇듯 미군정기부터

노동자 및 좌익정치세력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확립된 귀속재산 처리의 틀이 완전히 관철된 것이었다. 이 귀속재산 처리시스템의 유일한 약점은 처리과정에 노동자측이 소외되었다는 것인데, 조방은 이 측면에서도 의외로 자유로운 상황이었다. 관리인의 신분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정호종은 원래 조방의 기술자 출신으로 종업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존 경영진에 조방이 불하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했고, 불하대금의 공동출자를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은 갑자기 조방의 불하를 취소하고 우선권에 의해 불하를 받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던 관리인 정호종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을 구속했다. 힘들게 구축한 귀속재산 처리의 틀을 이승만정권 스스로 부정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조방불하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전부가 관리인의 경영상 부정과 같은 ‘경제적 혐의’였다. 그러나 정호종을 비롯한 조방의 기존 경영진의 구속은 이적 행위라는 ‘정치적 혐의’에 무게가 있었다.

이승만정권이 스스로 만든 귀속재산 처리법칙의 적용에 전혀 하자가 없었던 조방불하를 취소하고 경영진을 구속하는 ‘선택’을 한 데에는 고도의 정치역학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자 부산지역 대자본가로, 이사로서 조방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김지태이다. 그의 언급을 직접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막인 즉 국방부차관으로 있던 장경근(張暲根)씨의 사주를 받은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양자로 공인되고 있던 강일매씨가 조방을 탐내어 경무대로 이대통령을 찾아가서 ‘앞으로 조방 사장이 될 김지태 의원은 민우회(民友會)를 만들어 민국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미구에 신익희 의장을 대통령으로 옹립할 것이며, 현재의 중역진을 비롯한 간부들도 모조리 그의 영향을 받아 정부에 반대하는 불순분자들 뿐입니다'라고 모략한 다음 '이대로 두면 전국 최대 유일한 대조방(大朝紡)이 정적의 수중으로 들어갈 것이 뻔하며 지금도 부정을 저질러 막대한 이익금이 야당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허무맹랑한 중상을 하여 드디어 이대통령이 김창룡(金昌龍)대장에게 지시를 하여 사건은 일어난 것이다"³³⁾

김지태의 진술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된다. 국방부차관 장경근의 사주를 받은 강일매가 조방을 차지할 욕심으로 이승만에게 직접 기존 경영진을 무고했고, 그 내용은 기존 경영진은 '야당세력'으로 그들에게 불하되면 조방이 야당의 정치자금원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승만이 강일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심복인 특무대장 김창룡을 시켜서

33) 김지태, 1976, 『앞의 책』, 147쪽; 김지태는 생전에 여러 편의 회고록을 냈다. 가장 이른 것이 1968년 출간한 『김지태사장 창업35년사』, 다음이 1976년 출간한 『나의 이력서』, 그리고 1978년 『김지태회장 창업사십오년사』, 마지막이 1980년 출판된 『세계회고』 6이다. 김지태 사후에는 2003년에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라는 그의 전기가 출간되었다. 조방낙면사건과 관련해서 이들 회고록과 전기를 비교검토하면 거의 내용이 일치한다. 단지 『세계회고』에는 기존 경영진을 포함한 사람들 중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경제계의 새 실력자로 등장한 이모씨'이다. 1951년 시점에 경제계의 새 실력자로 등장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유력한 인물은 조방 사건에 버금가는 경제스캔들이었던 '중석불사건'의 주역 이연재(李年宰)를 들 수 있다. 무역업자인 이연재는 당시 이승만의 지원을 업고 경제계의 유력자로 등장하고 있었다. 조방노조 3대위원장 이었던 안종우(安鍾宇)는 훗날의 회고에서 이연재와 조방불하에 대해서 회담했다고 언급하고 있다(안종우, 1972, 「조방쟁의(上)」 『勞動公論』 2-8, 노동문제연구소, 117쪽). 이 사실은 이연재가 조방불하에 관심을 가지고 불하의 한 축인 노조와 직접 접촉하고 있었음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김지태가 언급한 '이모씨'가 이연재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조방낙면사건을 일으키고 기존 경영진을 구속했다는 것이다.³⁴⁾

김지태의 회고 중 우선 사건의 발단이 국방부차관 장경근의 사주로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장경근은 이승만의 핵심 브레인 중 한 사람으로 이승만이 독재의 길을 여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기 야당탄압과 여러 정치공작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³⁵⁾

다음으로 강일매가 조방을 차지할 욕심으로 처음부터 깊숙이 간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어떤 자료에서도 조방낙면사건과 관련한 강일매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이승만이 기존 경영진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맡길려고 했던 인물 중에도 강일매가 없기 때문이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가장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이승만이 ‘조방불하=야당정치자금원’의 인식을 가졌고, 그것을 저지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이승만의 지시문서가 남아있

34) 부산일보사가 발행한 『임시수도천일』에는 김지태가 이승만이 요구한 정치자금 제공요청을 거부한 것이 사건이 일어난 발단으로 쓰고 있다(부산일보사, 1983, 『임시수도천일』 상, 263쪽).

35) 일제시기 도쿄제국대학(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해방을 맞은 그는 이승만정권 수립후 판료의 길을 시작했다. 그가 이승만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사건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은 여기 저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내무부차관시절에 일어난 반민특위 습격사건에 대한 국회의 반발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 그였다. 또 그는 이승만의 종신연임의 길을 연 ‘사사오입개헌’ 당시 개헌안의 초안작업과 사사오입이라는 핵심 아이디어 제공에 참여했고, 1960년 3.15부정선거 당시에는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 겸 상임위원회 정책부장으로 부정선거의 방법을 기획하고 하달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본 연구의 인물정보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www.history.go.kr)’,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등 인물관련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참고로 했다.

어 정확하게 뒷받침된다. 이승만은 1951년 5월 조방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고 있다.

“조선방직회사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매우 거대한 국가재산에 관계되었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재정을 가지고 세력을 부식함으로서 법을 굽히고 사익을 도모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음으로 군법에 붙여서 처단한다는 의도가 있었으나...”³⁶⁾

‘거대한 재정을 가지고 세력을 부식함으로서 사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조방사건으로 구속된 정호중, 김지태, 장재봉 등 조방 경영진과 노조간부였다. 이승만이 세력을 부식하고 사익을 도모한다고 표현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1952년 3월 11일 전진한이 국회에서 선언한 조방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 담화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조선방직회사에 대해서 아직도 다소간 시비가 있는 모양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비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방침은 공업과 정당운동을 갈라놓으려는 것이니 만일 정당에서 각 공장과 생산기관을 붙잡아 가지면 거기서 나는 돈을 가져다가 정당운동하기에 바빠서 공업을 다 결단 내놓을 것이므로 어떤 생산기관이나 특별히 정부소속인 공장을 어느 정당에서든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조선방직회사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큰 공장이니만큼 무슨 정당이든지 막론하고 정당 손에는 들어가지 말게 할 작정이다. 종업원을 피어가지

36)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사건 처리에 관한 건(1951.5.14)」

고 자기들이 붙잡으려 하거나 또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 손에 넣으려고 하는 종업원은 다 밀어내고 단순한 생산발전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용해다가 맡길 터이니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 주장 하에서 일해야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내보내고 달리 조직할 것이니 다 알아듣기를 바라며 종시 못 알아듣고 공연한 시비를 일으키려고 할터이면 다 불리할 것이니 나의 의도를 다 양해해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³⁷⁾

거의 반협박조에 가까운 위의 대통령담화는 이승만이 ‘거대한 재정을 가지고 세력을 부식함으로서 사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정치세력’으로 보고 있고, 그들에게 조방을 불하하면 ‘거기서 나는 돈을 가져다가 정당운동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이승만은 김지태의 회고대로 조방의 기존 경영진과 노조간부들을 자신에게 반대하는 적대적 정치세력으로 보고 있었고, 이들이 조방을 차지할 경우 당시 한국 최대의 기업체가 자신의 정적들의 자금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조방사건을 일으켰음을 의외로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스스로 정한 틀에 의거한 조방불하를 저지하고 조방사건을 일으키는 정치적 선택의 핵심 주역은 이승만 자신이었다. 이승만의 이런 정치적 선택의 배경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당시 국회와의 정치적 대립 및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 있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승만과 정치적 대립을 하고 있던 국회가 이승만의 정치적 선택인 조방불하 저지와 국영화에 적극적

37) 공보처, 1953, 『앞의 책』, 212쪽.

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방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3월 20일 꾸러졌지만,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서 언급했듯이 3월말에는 국회상공위에 국회의원 11명에 의해 조방의 국영화안이 제출되었다. 조방 문제에 대한 이승만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국회가 굳이 견제행위라고 한 것은 1951년 5월 21일 제87차 국회본회의에서 군법회의에서 다루는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조방낙면사건은 5월 28일 일반사법재판소로 이관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 물론 이승만은 국회의 이런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 결과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내린 지시에서 가급적 사법부와 군법회의에서 합동으로 재판하도록 지시하고 있다.³⁸⁾

그러나 조방사건의 사법재판소 이관을 위한 국회의 결의안은 조방불하 저지와 국영화라는 이승만의 정치적 선택에 어떤 변화도 초래시키지 않았다. 국회는 조방의 갑작스런 불하취소에 급히 조사단을 조직하여 조사를 했지만 불하취소 결정 자체에는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는 조방의 국영화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국회는 조방 국영화의 근거로 다음의 4가지를 들었다.

- ① 헌법 87조, 귀속재산처리법 6조의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볼 때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조방은 당연히 국영으로 해야 한다.
- ② 원료의 대부분이 원조 원면, 국산 면화인바 국영·공영으로 함이 원료 확보 상 유리하다.
- ③ 민족자본 축적이 미약한 현실로서는 불하 후 시설 확충 및

38)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회사 사건에 관한 건(1951.5.14)」, 국가기록원.

운영 유지를 기하기 어렵다.

④ 농민에게 염가로 매수한 면화를 1개 모리기관을 위하여 제공·희생하는 것은 부당하다.³⁹⁾

이와 같은 국회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이승만과 같은 인식과 구도에서 나온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회 역시 조방이 ‘이승만의 정치자금원’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정치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방사건의 또 다른 축인 조방 노조 역시 장재봉 위원장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러한 조방사건의 정치과정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계획대로 불하되면 노조가 지분의 50%를 갖는 것인 만큼 노조가 조방불하와 이후 경영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좌절시킨 조방낙면사건에 대해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조방노조가 대한노총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었고 — 조방특별지부라고 불렀다 — 대한노총은 이승만이 상징적 보스로 있는 이승만의 최대 규모의 외곽정치세력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대한노총의 실질적 리더인 전진한은 강일매 임명이라는 이승만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 그는 사장 선임에 반대하지 말 것을 직접 지시했다. 또 여기에 대해 조방 노조의 일부가 반발하자 전진한은 장재봉 후임으로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안중우를 인책 사임시키고, 사임을 거부하는 감사위원장 이종국을 조합원 자격정지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일매의 사장 선임에 앞장섰다.⁴⁰⁾ 전진한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김지태가 그의 정치라이

39) 국회, 1952, 「일반국정감사보고서(1952.1)」, 324~325쪽.

40) 서문석, 「앞의 논문」, 80쪽;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였던 안중우의 증언은 조금 다르다. 전진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자신이 직접 당시 상공부장관

별이었던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진한은 김지태와 부산 갑구에서 경쟁하였으나 패했다.⁴¹⁾

조방 노조가 침묵한 원인에는 조방을 경영진과 노조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사실이 노동조합 상층부에 국한된 인식으로 일반 노동자의 경우 자신들이 불하를 통해 공장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을 뚜렷하게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조방 노조는 이승만의 외곽정치세력인 대한노총의 완벽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승만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조방노조가 반발할 이유가 없었다. 이것이 자신들이 조방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던 공동불하 계획이 좌절되고 자신들의 위원장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방사건에 대해 침묵한 노조 측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8월말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승만이 심복인 강일매를 조방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기존 선택의 변용을 피하면서 조방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승만은 조방 불하저지의 명분이자 그 스스로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만일 정당에서 각 공장과 생산기관을 붙잡아 가지면 거기서 나는 돈을 가져다가 정당운동하기에 바빠서 공업을 다 결단 내놓을 것이므로 어떤 생산기관이나 특별히 정부소속인 공장을 어느 정당에서든지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는 언급을 깨고 조방에 자신

이었던 김훈(金勳)과 협상하여 강일매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에 따른 조직개편은 중역진에 한정하고, 강일매 취임에 반대한 자신은 노조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이다(안중우, 1972, 「조방쟁의(上)」 『노동公論』 2-8, 노동문제연구소, 118쪽).

41) 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갑구는 김지태와 중도우파인 민족자주연맹의 임갑수(林甲守), 그리고 전진한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결국 김지태가 임갑수를 불과 400여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고, 전진한은 3위로 낙선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7,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150~151쪽).

의 세력을 부식하고 자신의 정치자금원이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이러한 선택의 변용에 대해 각 행위자들 역시 여기에 대응하여 기존 정치적 선택을 변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이 조방에 대해 자신이 경고한 내용을 그 스스로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연임을 획책하는 이승만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회의 정치적 대립이 보다 심각해졌고, 그 정치역학이 이승만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 선택의 변용—강일매의 관리인 임명과 조방쟁의

조방낙면사건을 계기로 한 이승만과 국회의 정치적 선택은 조방을 누구의 정치자금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 타협점은 조방의 국영화였다. 그러나 이 타협은 이승만에 의해 깨어진다. 1951년 9월 강일매의 조방 관리인 임명은 그 시작이었다. 이승만은 강일매를 임명함으로써 기존의 조방을 야당의 정치자금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방을 자신의 정치자금원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강일매의 조방관리인 임명이 이승만의 기존 정치 선택의 변용이었다는 것은 조방낙면사건을 통해 정호중, 김지태 등 경영진을 구속한 이승만이 국영화할 조방의 경영자로 처음에 생각한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이승만은 5월 14일 상공부장관 및 관재청장에 내린 지시에서 조방 국영화에 입각하여 공장을 경영할 인물로 면방직공장 경영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물을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승만은 자신이 생각한 구상에 맞는 인물로 두 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들은 김성곤(金成坤)과 최광원(崔光源)이었다.⁴²⁾ 김성

곤은 주지하듯이 쌍룡그룹 창업자로 당시 안양에 금성방직을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었고, 최광원은 원래 경성방직의 방직기술자 출신으로 귀속기업체 동양방직 영등포공장 — 당시에는 제일방직공사라고 했음 — 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규모 면방직공장을 경영한 경험이 있었던 반면 공장들이 전쟁피해로 인해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부산에 피난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1951년 봄의 시점에서 이승만이 구상하는 조선방직의 경영자로서 적임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김성곤과 최광원을 ‘방직업계에서 큰 성공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들 중에서 조방을 맡겨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의도’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⁴²⁾

김성곤과 최광원의 입장에서 그간 쌓아올린 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조방은 일거에 다시 한국 최고의 자본가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조방의 공개입찰을 둘러싸고 노조가 공개성명을 통해 ‘조방을 탐내는 정상배, 모리배, 외래기업주를 한사코 배격할 것이다’이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나, 당시 언론도 조방 입찰을 둘러싸고 수 개의 재벌이 활발한 움직임 보이고 있어 세간의 주목이 매우 크다’고 보도하고 있는 주인공 들 속에 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⁴⁴⁾

이렇듯 이승만의 최초의 생각은 조방을 면방직업계에 종사하

42)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회사 국영에 관한 건(1951.5.14)」; 자료에는 김성곤이 ‘김성권(金成權)’으로 나오나 이승만이 김성권을 가리켜 안양에서 큰 방직공장을 하고 있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면 김성곤이 확실하다.

43)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회사 국영에 관한 건(1951.5.14)」.

44) 구속된 장재봉의 후임으로 3대 노조위원장이 된 안중우는 조방 불하와 관련하여 조방 초대 관리인이었던 하원준(河元俊), 이연재와 회담했다고 회고하고 있다(안중우, 1972, 「앞의 글」, 117쪽). 이들도 조방 불하 경쟁에 뛰어들 수 개의 재벌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 인물에서 강일매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김지태의 회고 중 조방낙면사건의 계기가 된 중상모략을 강일매가 이승만에게 했다는 대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김지태의 말대로라면 이미 5월의 대통령지시에서 경영권을 맡길 인물에 강일매가 당연히 나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5월의 시점에서 강일매는 방직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라는 이승만의 구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강일매는 당시 국내 최대의 기업체 사장에 내정될 정도로 경영능력이 검증됐거나 노동자들의 신망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다. 1949년 동화백화점 관리인이 되기까지 영화사 사장, 여론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경제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⁴⁵⁾ 동화백화점 관리인이 되어서도 전임 관리인과의 경영권 분쟁, 파행적 백화점 운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⁴⁶⁾ 이승만에게 있어서 이런 강일매의 가장 큰 매력은 그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심복이었다는 사실이다. 강일매가 이승만의 심복이었던 계기에 대해서는 이승만과 강일매 부친의 관계, 이승만과 강일매 누이와의 관계, 강일매가 이승만의 양자라는 설 등 다양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다.⁴⁷⁾ 그러나 최근 공개된 「이승만 문서」를 보면 강일매가 이미 해방직후부터 이승만에게 직접 수차례에 걸쳐 자금지원을 받아가며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

45) 대한민국건국10년지편찬위원회, 1956, 「인사록」 『대한민국건국10년지』, 958쪽.

46) 『동아일보』 1950. 5. 9.

47) 中尾美知子, 「앞의 논문」, 10쪽; 「부산의 상백15」 『국제신문』 1990. 10. 27.

48) 확인되는 것만도 1947년 5월 18일 5,000원, 12월 14일 10,000원, 1948년 3월 3일 3,000원을 이승만에게 직접 받았다(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1998, 『우남이승만 문서-東文篇』 15, 중앙일보사, 161, 207, 265쪽).

결국 국회와의 갈등 속에 대통령 연임의 길이 점점 험난해지는 상황에서 급격히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던 이승만은 애초의 구상을 버리고 조방을 자신의 정치자금원이자 정치세력으로 만들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선택한 인물이 강일매였다. 결국 이승만의 강일매의 선택은 조방낙면사건이라는 정치적 선택의 변용이었던 것이다. 그 목적은 조방의 야당정치자금원 저지에서 자신의 정치자금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일매가 조방의 새로운 경영자로 내정된 것은 1951년 8월초이다. 그러나 조방과 같은 대규모 기업의 경영에 강일매의 인선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을 정도였다.⁴⁹⁾ 그러나 구속된 기존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9월 5일 강일매는 전격적으로 조방 관리인에 임명되었다. 강일매를 회고하는 모든 자료들은 강일매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끄은 차를 타고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강일매의 관리인 임명이 이승만의 뜻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조방의 경영권을 장악한 강일매는 이승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강일매는 취임 후 조방내에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사원급 67명을 포함한 총 120명의 신규채용을 실시했던 것이다. 귀속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상공부가 생산성 증강과 관련이 없는 조직 확대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된 조치였다.⁵⁰⁾ 신규채용자 중 업무부장이 강일매의 매부, 경리과장이 처남, 후생과장이 동서로서 근친자를

49) 8월초 중앙관계위원회는 조방의 새 경영진으로 사장 강일매, 전무 배제인(裴濟人), 상무 유재룡(劉載龍), 심문(沈文)을 내정했으나,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전면적인 보류가 결정되었다(『국제신보』 1951.8.8; 8.11).

50) 국회특별위원회, 1992, 『특별위원회 활동개요-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80쪽.

중심으로 강일매가 동화백화점 관리인시대의 직속부하를 중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⁵¹⁾ 한편으로는 사규에 의한다는 구실로 조방 재직기간이 20~30년 된 60세 이상 직공 20여명을 해고하였다. 노조에 대해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부식시키는 한편으로 기존 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실시하였다.⁵²⁾ 이 부문은 조방노조가 강일매 퇴진을 목표로 쟁의를 시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강일매의 취임 후 행보는 조방노조와 그 상부기관인 대한노총을 자극했고, 이것은 195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진 조방쟁의와 파업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승만의 절대적 지원을 토대로 승리한 강일매는 이후 본격화되는 이승만의 대통령연임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 조방을 친위정치세력이자 정치자금원으로 활용하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강일매에 의해 어용화된 조방노조는 이승만 연임을 지지하는 원외자유당의 영향하에서 조방 내에 민의동원본부를 두고 ‘딱벌떼’, ‘백골단’, ‘민족자결단’ 등 관제민의단체를 만들어 테러습격과 데모 등을 벌였고, 조방 자체가 이들의 인적, 물적지원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이다.⁵³⁾

강일매가 1952년 이승만의 대통령 연임을 위한 정치파동의 중심부에 있었음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52년 6월 25일 부산 충무로광장에서 한국전쟁기념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이승만을 저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최대 야당 민국당 국회의원 김시현(金始顯)이 연

51) 中尾美知子, 1990, 「앞의 논문」, 41쪽.

52) 국회특별위원회, 1992, 『앞의 책』, 180쪽.

53) 김영태, 1972, 「‘도큐멘타리’ 노동운동20년소사—1952년 4월부터 1954년 12월까지—」 『勞動公論』 2-5, 노동문제연구소, 154쪽.

루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국회에 타격을 가하고, 대통령직 연임을 노리는 이승만에게는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경무대 경찰서장이었던 이정석(李丁錫)은 뒤에 흥미로운 진술을 하고 있다. 즉 강일매가 김시현에게 경제적 도움을 많이 주었고, 경무대에 데려가 이승만에게도 인사시켰으며, 이런 일들이 있는지 얼마 후 김시현이 이승만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것이다.⁵⁴⁾ 문맥을 읽기에 따라서는 강일매가 돈으로 김시현을 매수하여 이승만 암살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경무대 경찰서장이었고, 이후 정계에 진출하여 5선 국회의원이 된 이정석의 지위⁵⁵⁾로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말로 보기는 힘들고, 최소한 강일매가 이 사건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조방의 자금을 바탕으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포섭작업에 강일매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은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승만이 강일매를 조방의 관리인으로 앉히고 이를 통해 조방을 자신의 정치세력이자 정치자금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반발한 것은 조방노조와 그 배후라고 할 수 있는 대한노총의 전진한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처음에 노조와 전진한의 정치적 선택은 강일매의 관리인 임명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전진한은 강일매의 임명에 노조가 반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정도였다. 그러나 강일매가 취임 후 급속하게 자신의 세력을 부식하기 위해 대대적인 신규채용과 해

54) 부산일보사, 1983, 『앞의 책』 상, 410~411쪽.

55) 이정석은 1917년 충북 음성 출신으로 경무대경찰서장, 동대문경찰서장 등 경찰 고위직을 거친 후 4대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이후 5대, 7대, 8대, 1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고를 단행하고 노조까지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기존 노조를 탄압하자 조방노조는 전진한의 지휘아래 전면적인 대립을 선언하고 결국 파업에까지 이르게 된다. 대립의 정점은 1952년 2월 국회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국회의원이 된 전진한이 1952년 3월 12일부터 조방의 총파업을 3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는 강일매의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과 함께 국제자유노련과 UN노동기구 등 세계 노동계에 조방에서의 노동탄압을 호소할 것도 언명하였다.⁵⁶⁾

그러나 전진한을 중핵으로 한 대한노총과 조방노조의 저항은 전진한의 선언에 대해 이승만이 즉각적으로 같은 날 파업을 ‘공연한 시비’로 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대통령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승만의 경고에 굴복한 전진한이 파업을 24시간 시한부파업으로서 종결하고 13일부터 직장으로 복귀할 것이며, 국제 노동기구들에 대한 제소문제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파업선언이라는 거창한 시작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고 굴욕적인 종결이었다. 전진한과 조방노조는 최초의 이승만의 정치선택에 대해서 묵인했고, 강일매를 통한 조방의 이승만 대통령 연임을 위한 정치자금원화라는 정치적 선택의 변용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그러나 조방쟁의의 진행과 결말을 정치과정을 보면 이들이 이승만이 조방을 자신의 정치자금원화하는데 반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단지 반발한 것은 강일매의 독선적이고 노조탄압적인 경영스타일에 있었다. 대통령의 담화 한마디에 2개월 이상 끌어온 쟁의가 순식간에 종결되어버렸던 결말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56) 『국제신보』 1952.3.13

전진한의 조방파업 종결선언은 안중우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조방노조나 대한노총의 간부들과 상의한 후 결정한 것이 아닌 전진한 개인의 독단적 결정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승만의 의지가 명확한 이상 그것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⁵⁷⁾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조방노조 자신이 이러한 전진한의 독단에 별다른 저항 없이 따랐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1951년부터 1952년에 걸친 조방쟁의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정치성은 대체로 이승만의 정치적 선택과 변용의 범위 안에서 운동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승만의 선택의 변용에 대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대응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초의 이승만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국회는 ‘국영화’라는 합일점, 다시 말해 조방이 이승만의 정치자금원이 되지 않으면 된다는 선에서 타협하는 정치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이후 선택의 변용으로서 강일매의 관리인임을 통해 조방을 자신의 정치자금원화 하려고 하자 국회 역시 기존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변용이 필요했다. 물론 그것은 조방이 이승만의 대통령연임을 위한 정치자금원화 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가시적 행동은 조방쟁의와 관련하여 전진한과 조방노조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방 종업원들의 국회의사당에서 강일매 퇴진을 주장하는 기습시위가 있었던 1952년 1월 21일 제10차 국회 본회의에서 조방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꾸러지게 되었다. 조사단 구성은 자유당 2명, 민국당 1명, 민우회 1명, 무소속 1명의 총 5명이었다. 1월 25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2월 29일 제24차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57) 안중우, 1972, 「앞의 글」, 165쪽.

이를 참조로 조방쟁의와 관련한 국회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강일매의 퇴진과 노조 역시 쟁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었다.⁵⁸⁾

그러나 조방사건을 두고 이승만과 대립한 국회의 정치적 선택은 위력이 없었다. 강일매 해임의 국회 결의안은 무시되었고, 조방파업은 강일매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1952년 3월의 결말은 다가올 개헌을 둘러싼 이승만과 국회의 대립의 결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조방사건을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조방사건을 둘러싼 행위주체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승만, 국회, 전진한과 조방노조가 그것이다. 조방사건의 정치과정을 주도한 것은 이승만이였다. 이승만은 조방 불하를 정치적 시각에서 보았고, ‘조방불하=야당정치자금원’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승만의 정치적 선택이 조방낙면사건이였다. 이승만은 조방을 국영화하고 면방직공장 경영의 경험이 있는 기업가에게 경영하게 함으로써 조방이 야당의 정치자금원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 또 다른 두 행위주체인 국회와 전진한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는 크게 반발하지 않는 정치적 선택을 하였다. 국회는 국영화에 찬동하였고, 노조는 강일매의 관리인 임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회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자신의 대통령 연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정치역학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58) 조방쟁의에 대한 국회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결의사항과 관련해서는 국회특별위원회, 1992, 『앞의 책』, 178~186쪽 참조.

변용을 가한다. 조방 관리인으로 강일매를 임명하고 동 회사를 자신의 정치세력이자 물적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그 내용이다. 국회와 노조는 이승만의 변용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도 변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진한과 대한노총을 배후로 한 조방쟁의와 국회의 강일매 퇴진결의는 그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정치과정의 최종 승자는 이승만이였다. 국회는 그 성격상 하나의 정치적 선택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려운 집단이었고, 이승만의 끊임없는 압력과 분열공작에 굴복하였다. 전진한과 조방노조는 원래 이승만의 외곽정치세력으로 조방을 자신의 정치자금원으로 만들려는 이승만의 의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이승만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명한 강일매가 독단적 경영으로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고 노조를 탄압하자 여기에 반발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이 직접적으로 강일매의 손을 들어주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조방은 이승만의 의도대로 대통령 연임을 위한 1952년 정치파동에서 핵심적인 정치세력이자 물적기반으로 활약했다. 따지고 보면 조방사건의 정치과정과 그 결말은 이승만 장기독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조방은 1960년대 몰락하여 자취를 감추었다. 식민지유산의 정치적 처리가 가져온 결말이었다.

【참고문헌】

- 배석만, 2001, 「해방후 조선방직의 경영과 그 성격」 『지역과역사』 9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 서문석, 2007, 「1950년대 귀속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사학』 한국경영사학회.
- 中尾美知子, 1990, 『1951-52년 조선방직쟁의—현대한국 노사관계의 스타트

라인』 고려대 사학과 석사논문.

- 中尾美知子, 1991, 1992, 「1951-52年朝鮮紡織爭議—現代韓國勞使關係のスタートライン(1)(2)」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397, 399号,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
- 『동아일보』
- 『국제신보』
- 『부산일보』
- 「귀속기업체(조방)의 불하에 관한 보고」 『제6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부산의 상백15」 『국제신문』 1990. 10. 27.
- 『김지태사장 창업35년사』, 1968.
- 『김지태회장 창업사십오년사』 1978.
- 공보처, 1953, 「조방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 국회, 1952, 「일반국정감사보고서(1952.1)」
- 국회특별위원회, 1992, 『특별위원회 활동개요—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 국회—』
- 김영태, 1972, 「‘도큐멘터리’ 노동운동20년소사—1952년 4월부터 1954년 12월까지—」 『노동공론』 2-5, 노동문제연구소.
- 김지태, 1976, 『나의 이력서』 한국능률협회.
-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사건 처리에 관한 건(1951.5.14)」, 국가기록원.
-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회사 사건에 관한 건(1951.5.14)」 국가기록원.
-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회사 국영에 관한 건(1951.5.14)」 국가기록원.
- 대한민국건국10년지편찬위원회, 1956, 「인사록」 『대한민국건국10년지』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1956, 1958.
- 부산일보사, 1983, 『임시수도천일』 상.
- 안종우, 1972, 「조방쟁의(上)」 『노동공론』 2-8, 노동문제연구소.
-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1998, 『우남이승만문서-東文篇』 15, 중앙일보사.
- 지명김지태전기간행위원회, 2003,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

다』, 석필.

-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 1960, 『진정서—조선방직주식회사 종업원 피탈주권 환원에 관한 건—』
- 조선방직주식회사, 1952, 『조방의 개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7,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 한국일보사, 1980, 『재계회고』 6.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www.history.go.kr)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방사건’의 전개과정을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조방사건에 간여한 행위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승만, 국회, 조방노조가 그것이다. 각 행위자의 ‘정치적 선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방사건의 정치과정을 주도한 것은 이승만이였다. 이승만은 조방 불하를 정치적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저지했다. 그리고 자신의 심복에게 경영을 맡겨 조방을 정치자금원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국회는 이승만의 조방 불하저지에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이 조방을 자신의 정치자금원으로 만드는 것에는 저항했다. 마지막으로 조방노조는 이승만이 조방을 자신의 정치자금원으로 하는 데는 불만이 없었으나 이승만이 경영자로 임명한 강일매(姜一邁)의 독단적 경영에는 반대했다. 이 정치과정의 최종 승자는 이승만이였다. 그 결과 조방은 이승만의 의도대로 대통령 연임을 위한 1952년 정치파동에서 핵심적인 경제기반으로 역할을 다하였다.

핵심주제어: 조방사건, 귀속재산, 불하, 이승만, 국회, 조방노조

【Abstract】

The Political Consideration of 'Jobang(朝紡) Affair'

Bae, Suk-man

This study examined the progress of 'Jobang Affair' in the political aspect. The parties concerned with 'Jobang Affair' are to be classified into three parties: Lhee Syngman, the National Assembly, and Jobang labor union. Their political choice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Lhee Syngman that took the lead in the progress of 'Jobang Affair'. He obstructed the disposal of Jobang for a political purpose. He also entrusted his confidential follower with the management of Jobang in order to use it as the source of political funds. Second, though the National Assembly agreed with Lhee Syngman on the matter of disposal of Jobang, it protested him making Jobang into the source of political funds. Finally, Jobang labor union didn't care him using Jobang as the source of political funds. But the union objected to the arbitrary management of Kang Ilmae(姜一邁) being appointed a manager by Lhee Syngman. The final victor in the political affair was Lhee Syngman. Jobang filled the important role of financial foundation for his reelection in 1952.

Key words: Jobang affair, government-vested properties, disposal, Lhee Syngman, the National Assembly, Jobang labor union